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논란·의혹 정리 (3/26 기준)

[표1]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논란·의혹 (11명)

링크는 후보자 정보	출마단위(경선 여부 등)	주요 경력	범죄 이력	기타
	논란·의혹 (장·차관 재직 중과 재직 전후 구분)			
권영세	서울 용산구 (단수)	- 통일부 장관 - 21대 국회의원 (서울 용산구)	- 범죄 이력 없음.	
	■ 통일부 장관 재직 때 주요 논란 -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 관련해 당시에는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었으나, 2022년에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하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여 논란이 됨. 당시 통일부의 입장 번복에 권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5일에 열린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된다”며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한다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을 지시함. 심리전은 군사적 개념으로 ‘심리작전’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국군심리전단이 유일함에도 대통령이 통일부에 국민을 대상으로 대응 심리전을 지시한 것에 통일부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참여연대가 통일부에 보낸 질의서와 통일부의 답변서). 2022년 11월, 권영세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해,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는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의 충돌을 조장하는 것으로 통일부 장관의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됨. - 통일부 장관 재직 중인 2022년 12월 26일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함. ■ 통일부 장관 업무 중 가상자산 거래 논란 2023년 7월 2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됨.			
김완섭	강원 원주시 을 (경선)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범죄 이력 없음.	
	■ 차관 임명 6개월도 안 돼 총선 출마 논란: 2023. 7. 3.~12. 28. 재임 ■ 서울 강남구 외에도 세종 이전 정부 부처 대상 특별공급으로 세종에도 아파트 보유 논란			
박민식	서울 강서구 을 (단수)	- 국가보훈부 장관 - 18대, 19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범죄 이력 없음.	
	■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친일에 대한 옹호,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고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주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2023년 3월 26일, 박민식 장관이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힘.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안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해 논란을 될 때, 박민식 장관이 2023년 9월 1일, KBS에 나와 "홍범도 장군이 두 번째 받은 훈장인 대한민국장은 (타당한) 절차가 없었다"며 훈장 재검토 뜻을 밝힘. 2023년 7월 24일,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라 적은 문구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함. 2023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민식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것"이라고 답하며,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명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대해 "흠결이 많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음. 2023년 11월 10일,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불법이라는 비판이 있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 "국립묘지에 어떤 곳에서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며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 2023년 8월 22일, 박민식 장관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산당 나팔수의 기념 공원을 짓겠다는 건가"라며 철회를 요구함. 2023년 12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박민식 장관은 "운동권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특혜법"이라 비판함.			
박성훈	부산 북구 을 (경선)	- 해양수산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범죄 이력 없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확산 대응 관련 논란 2023년 7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확산 우려와 관련해, 주무 부처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출하 전 검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검사 대상이 일부 표본에 그쳤고, 이후 뒤늦게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무제가 아닌 참여제 검사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2023년 7월 20일, 박성훈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일컬어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발언함. 2023년 9월 19일,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 '오염 처리수'를 사용하자고 주장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 IAEA나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염 처리수'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함. ■ 차관 임명 6개월도 안 돼 총선 출마 논란: 2023. 7. 3.~12. 27. 재임			
박진	서울 서대문구 을 (단수)	- 외교부 장관 - 16, 17, 18, 21대 국회의원 (21대, 서울 강남구 을)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80만원 /	
	■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주요 논란 2023년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을 발표함.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외교 치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인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의 수행단 동행 논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한-미·한-일 공식 정상회담 개최 실패 등으로 '외교참사' 논란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함. 2022년 12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 때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함. ■ 외교부 장관 재직 전 공직윤리 관련 논란과 의혹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박연차 게이트' 등) 등 두 차례 벌금형 선고 21대 총선 출마 때와 당선 뒤 두 차례에 걸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한국외대 석좌교수 7년 재직 중 정규 강의·연구 없이 3억 원 급여 수령		
방문규	경기 수원시 병 (단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범죄 이력 없음.
	■ 국무조정실장 재직 때 주요 논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 10.29 이태원 참사 초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무조정실에서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방문규 실장은 참사 다음날인 30일 02:30에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도착해 한 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회의(새벽 01:50)에 참석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짐. -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내역 전수 조사 통한 시민사회단체 탄압 논란 -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함께 주도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직 때 주요 논란 - 원전 육성·수출 정책 적극 추진 - 장관 임명 3개월여 만에 총선 출마 논란: 2023. 9. 20.~2024. 1. 4. 재임 - 장관 이임식 전인 현직 장관 신분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내놓는 자리인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도 일으킴. ■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 공개를 피하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꼼수 소득공제'를 받다가 뒤늦게 반납함.		
신범철	충남 천안시 갑 (단수)	- 국방부 차관 - 경제사회연구원장 - 국립외교원 교수	- 범죄 이력 없음.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신범철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임성근 1사단장을 수사 기록에서 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증언 등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신 차관과 김 사령관은 문자를 주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함.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첩 보류 뒤에 후속조치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됨.		
원희룡	인천 계양구 을 (단수)	- 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 갑)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80만원 / 2019.02.14. (제주지법, 양측 항소 포기)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90만원 / 2020.01. (제주지법)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재직 때,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 사업의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 근처로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함. ■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 논란 -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 그럼에도 장관 퇴임 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음.		
조승환	부산 중구 영도구 (경선)	-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범죄 이력 없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확산 대응 관련 논란 ● 조승환 장관 재직 때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를 불식한다는 취지로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5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했으나, 분석을 신청한 수산물에 어느 기초 단위, 어느 위판장에서 파는 건지 알 수 없고, 검사장비도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짐.		
추경호	대구 달성군 (단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대, 21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범죄 이력 없음.
	■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때 주요 논란 ●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만 56조4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펄크' 사태를 일으킴. ●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음. ■ 과거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관여 의혹 ● 재정경제부(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인수하고 매각하기까지 실무와 정책 결정 등 전 과정에 관여해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됨(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등 관련 자료). ■ 공직윤리 관련 논란 ● 공기업 파견직이던 둘째 딸 1년 만에 정규직 전환 '아빠찬스' 의혹 ● 한 집에 사는 두 딸 '독립 생계' 이유로 재산 공개 고지 거부 논란		
한창섭	경기 고양시 갑 (단수)	- 행정안전부 차관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정실장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범죄 이력 없음.
	■ 10.29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대행 수행(2023.02.08.~07.25.) ■ 경기 고양시 일산 외에도 세종 이전 정부 부처 대상 특별공급으로 세종에도 아파트 보유 논란		

[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논란·의혹 (15명)

이름	출마단위(경선 여부 등)	주요 경력	범죄 이력	기타
강승규	충남 홍성군 예산군 (단수)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18대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갑)	- 범죄 이력 없음.	
■ 시민사회수석 재직 중 주요 논란과 의혹 ●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앞 관제 시위 중용 의혹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직후인 2022년 9월 22일에 보수단체 인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의 통화에서,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라는 남성의 말에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 라며 MBC 앞 관제 시위를 중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됨. 이 통화 뒤 2022년 말까지 MBC 앞에서 30차례 이상의 집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상당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당무 개입 논란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23년 1월 4일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신업 변호사 측 인사와 나눈 통화에서 강 변호사의 출마를 자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불출마 선언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됨.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하면 김 여사가 소환된다며 출마 자제를 중용해 파장이 일어났음. 당시 강승규 수석은 “대선 경선 때부터 친분이 있는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라고 해명함.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과거 의원을 지낸 마포지역 국민의힘 당원 카톡방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행정관들이 초대해 당원들이 ‘김기현 홍보·안철수 비방’ 메시지를 올림. 대통령실 직원들이 문제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 방에서 국정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태로 논란이 불거짐.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강승규 수석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함. ●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10대 우수제안 선정 논란 - 대통령실, 국민제안 10대 우수제안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선정 논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주관해 국민제안심시위원회가 선정함. 이른바 ‘어뷰징’(중복 투표) 논란 등 변별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안사항의 추진은 유보됨. ■ 시민사회수석 재직 중 발언 논란 ●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관련 -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검찰에 근무할 때 수사관이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을 대통령실 부속실 6급 행정요원으로 사적 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해 당시 강승규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행정요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되었다”며,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지하지 않겠다”고 발언. 국무 유튜브버 누나 안 모 씨 채용 등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채용 제도는 공채 아닌 비공개 채용, 즉 업관제”라 주장해 논란이 커짐. ●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논란 관련 - 강승규 수석은 당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키움. “컨트론타워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며, “대통령이 관저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금 잠시 사저에 머무르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고도 주장함. ■ 시민사회수석 재직 중 공직윤리 관련 논란				

	강승규 수석은 2023년 3월~5월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은 물론, 예산과 같은 선거구로 묶인 홍성의 지역 행사까지 찾아 명함을 돌리고, 대통령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시민사회수석' 명의 축기와 화환, 대통령 시계 등을 보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낸 '국정 홍보' 메시지에 자신이 예산 출신임을 밝힌 사실이 드러남. 또 2023년 강 수석 측 관계자들 주도로 지지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속한 '홍성·예산 발전협의회'(홍예연)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2023년 11월 25일, 39일과 12월 8일에 모임을 갖고 식사를 대접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음. 2024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강승규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김기홍	인천 연수구 을 (경선)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 부대변인 - KBS 기자	- 범죄 이력 없음.
	■ 윤석열 대선 캠프로 옮길 때 KBS윤리강령 위반 논란 2021년 6월 25일 KBS 기자를 사직하자마자, 사흘 만인 6월 28일에 윤석열 대선 캠프 부대변인으로 옮김. 이는 "TV 및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공영미디어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KBS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해 논란이 일어남.		
김은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경선)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21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 (이명박)대통령실 대변인	- 범죄 이력 없음.
	■ 홍보수석 재직 중 주요 논란 관련 - 국정감사 중 '웃기고 있네' 필담 관련 국회 모독 논란 2022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 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 라고 메모를 적는 모습이 언론 사진으로 잡혀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이라도 공개하라"고 했으나, 강승규 수석이 사과를 하면서도 "사적 대화"라며 대화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자, 김 수석과 강 수석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치당함. -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해명 논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중인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바이든-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발언 15시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해명함. 또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 특히 거대 야당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여론 왜곡', '야당 비하' 논란이 일자, 이후 대통령실에서 "이 XX 발언은 야당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 김은혜 수석의 해명을 반복함. - 해외기업(넷플릭스)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 논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인 2023.04.25.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3천억 원)를 K콘텐츠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대통령실 보도자료)과 관련해, 김 수석 본인과 배우자가 외국기업인 넷플릭스 주식을 각각 84주와 112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남(2023.03.30. 관보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기준). 당시 김은혜 수석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함. 다만 2005.12.16.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매각·백지신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홍보수석 재직 전 경기도지사 후보 때 재산 16억여 원 축소 신고 2022년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함.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천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로 밝히고,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힘.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4분의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 발언한 것도 후보자 재산 신고와 다르다고 판단함.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함. ■ KT 전무 재직 때 채용 청탁 논란 2010년 12월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이던 김은혜 후보는 KT에 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콘텐츠 전략 담당 전무'로 영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어났음.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이 2012년 이석재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대가로,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자신의 딸을 2012년에 정규직으로 특채된 사실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2019년 기소됐고,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서 김은혜 후보자도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건으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후보자는 당시 "그런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음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됨.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추천한 지원자가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답변함. 다만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추천한 지원자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짐. ■ 국회의원 재임 중 정책 입법 활동 관련 2021년 9월 8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 2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상훈	비례 (국민의미래 16번, 지역구 낙천 뒤 공천)	-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 범죄 이력 없음.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둘째 사위
	■ 윤석열 정부 정책 난맥상 관련 책임 논란 2022년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교육부의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안' 발표, 2023년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정책을 공개 부인하는 등 문제적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안상훈 사회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짐. ■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당무 개입 논란 2023년 1월 5일,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헝가리식 출생 장려 정책을 밝힌 것에 대해, 바로 다음날 안 수석이 "나 위원장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초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부인함.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나 부위원장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어났음. 결국 2023년 1월 10일 위촉된지 석 달도 안 된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임하고 당대표 경선 출마도 포기함.			
이원모	경기 용인시 갑 (단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범죄 이력 없음.	
	■ 인사비서관 재직 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 책임 논란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등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음(참여연대의 관련 자료). 특히 2023. 02.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실패(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하루 만에 사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참여연대는 당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인사검증 책임자와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음(참여연대의 관련 자료). ■ 윤 대통령 부부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때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의 수행단 참여 논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일정 때,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민간인임에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 수행단으로 먼저 출국하고, 순방 중에는 김건희 여사 지원 업무를 하다가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귀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났음.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함. 이후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와 모친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경선 때인 2021년 7월에 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후원한 고액후원자임이 밝혀짐. ■ 검사 재직 때 수사 관련 대전지검 검사로 재직할 때인 2020년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참여연대의 [그사건 그검사] 참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관련해 참여연대의 수사 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검찰은 지검장-차장검사-부장검사는 공개했으나, 수사참여 검사는 공개하지 않음.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임.		
임종득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단수)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	- 범죄 이력 없음.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행사 관여 의혹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2023년 10월 24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임(참여연대·민변의 고발장 참고). 군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2023년 8월 2일 통화기록을 통해 김 사령관이 이 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		
장성민	경기 안산시 갑 (단수)	-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 16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 명예훼손 / 벌금 150만원 / 2008.08.12.
	■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에 따른 16대 국회의원직 상실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민주당 소속)의 선거사무장 권모 씨에 대해 2002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당시 16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함(기사).		
전희경	경기 의정부시 갑 (단수)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 -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범죄 이력 없음.
	■ 20대 총선 때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시인 20대 총선 때인 2016년 4월 11일,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9번으로 공천된 전희경 후보자의 이화여대 석사 논문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 (2001년)가 논문의 60~79% 이상을 다른 논문에서 인용 없이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2017년 3월 23일 석사 학위 논문을 스스로 반납함. 당시 전 후보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석사 논문 심사 때) 제가 여러 기존 문헌을 참고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적었다고 지적받았던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병복 전 교수 등) 그분들 존함을 처음 들었다"라고 해명함. 그러나 이화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2016년 12월 28일 전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본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 3월 23일 전 후보가 이화여대 위원회에 석사 학위 논문을 반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이에 이화여대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함.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및 발언 논란 - 전희경 후보자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참여해 연설함. 가령, 2017년 2월 18일 탄기국 제13차 태극기 집회에서 그는 "촛불이 물러나고 헌법재판소가 태극기의 힘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 믿는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 바로 위에서 조롱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발언함. 전 후보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대출 의원 등과 함께 탄핵 선고를 앞둔 2017년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주진우	부산 해운대구 갑 (단수)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	- 범죄 이력 없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법률비서관 재직 때 김건희 여사 고발사건 업무 수행 및 대통령실 관련 정보공개 거부 관여 2023년 1월 30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민간인인 김 여사의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과 함께, 참여연대가 관련 근거 규정인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함(참여연대의 관련 자료 참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의 운영규정·직원명단·감찰규정 등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처분하고, 그에 따라 제기된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등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음(참여연대의 관련 자료 참고).			
강명구	경북 구미시 을 (경선)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벌금 100만원 / 2003.04.15	
강세원	비례 (국민의미래, 21번)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범죄 이력 없음.	
서승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략)	-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박근혜)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범죄 이력 없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후보 경선에서 패했으나,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낙천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지역구 후보자로 우선 추천됨.
신재경	인천 남동구 을 (경선)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 범죄 이력 없음.	
이승환	서울 중랑구 을 (단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	- 범죄 이력 없음.	
조지연	경북 경산시 (단수)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후보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메시지팀장	- 범죄 이력 없음.	

[표3]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중 22대 총선 낙천자 (장·차관 6명, 대통령실 25명)

이름	장·차관급 퇴직 시 직위	이름	장·차관급 퇴직 시 직위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름	대통령실 퇴직 시 직위	이름	대통령실 퇴직 시 직위
권오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대남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 행정관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김보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	김성용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성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김원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실 행정관
김유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인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찬영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배철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성은경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신진영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명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동석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이병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부형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전광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
전지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외협력비서관실 행정관	정호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천효정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최단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최지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허성우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
허청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실 행정관		